
제1차('23~'27)
후계 ·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

2022. 10. 5



농림축산식품부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	1
II. 농업 인력구조 및 정책 여건	2
III. 그간의 정책 성과 및 한계	4
IV. 추진방향	7
V. 세부 추진과제	10
VI. 추진체계	32
참고. 과제별 추진 일정	34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1. [추진배경] 후계·청년농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

- (배경)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*된 「후계청년농어업인법」에 따라 제1차 육성 기본계획(‘23~’27) 수립 추진

* 제1조(목적) :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(대상) 청년농(만 40세 미만) 및 후계농(만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미만)

< 청년농과 후계농 정의 >

요건	연령요건	영농경력	취업자 포함여부	규모('20)
청년농	만 40세 미만	-	포함	창업 : 12,426명 취업 : 10,192명
후계농	만 50세 미만	10년 미만	미포함	33,470명

2. [주요경과] 청년농업인 창업 중심 지원 체계 운영

- 「청년창업농 육성대책」을 수립(‘17)하여 청년들의 영농창업·정착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중
 - 청년창업농 선발, 초기정착, 영농창업 기반(농지·자금 등), 교육·컨설팅 지원과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농업분야 신규인력 육성 중

< 참고 :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연혁 >

구분	주요 내용
청년농 육성 종합대책 (‘17.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년농의 정착 → 성장의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- 영농정착지원 사업체계 구축, 농지은행 농지 최우선 임대, 후계농 자금 지원 등
↓	
스마트팜 확산방안 (‘18.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-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 구축, 스마트팜 종합 자금 및 벤처펀드 조성 추진
↓	
창업 애로 해소방안 마련 (‘20.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40세대 창업 애로 해소방안 마련 - 청년농의 농지·시설·판로지원 강화, 심층 컨설팅 및 첨단 기술교육 등 지원
↓	
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정 (‘21.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후계·청년농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- 청년농 정의 규정 신설, 후계·청년농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(5개년) 수립

Ⅱ. 농업 인력구조 및 정책 여건

1. [인력구조] 농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 심화

□ (농가인구) 지난 30년 동안 농가 인구와 농가 수는 지속 감소

- '20년 기준 농가 인구는 2,314천명, 농가 수는 1,035천가구로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.3%, 41.4% 감소

* 농가인구(비중) : ('90) 6,661천명(15.6%) → ('00) 4,031(8.6) → ('10) 3,063(6.2) → ('20) 2,314(4.5)

* 농가 수(비중) : ('90) 1,767천가구(20.1%) → ('00) 1,383(9.6) → ('10) 1,177(6.7) → ('20) 1,035(4.8)

□ (고령화)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도 감소 추세

- '20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6.1세,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56.0%(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4.3%)로 고령화 심화

*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: ('90) 53.4세 → ('10) 62.3 → ('20) 66.1

*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(비중) : ('90) 323천가구(18.2%) → ('10) 546(46.4) → ('20) 579(56.0)

- 반면, 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1.24%로 지난 30여년간 지속 감소

*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(비중) : ('90) 258천가구(14.6%) → ('10) 33(2.8) → ('20) 12(1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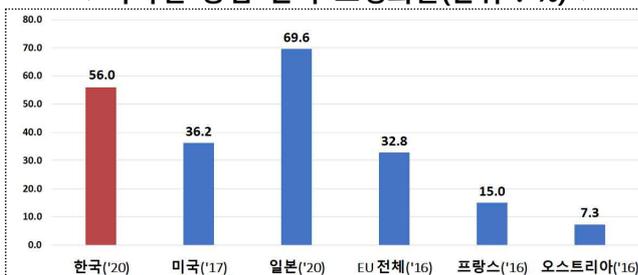
- 후계농업인(만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미만) 규모도 전체의 3.3%에 불과

- 주요국에 비해 농업 분야 고령화율(65세 이상 비율, 56.0%)이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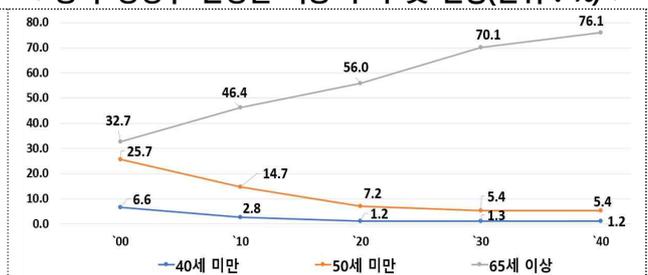
□ (전망)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

- '40년 기준 농업 분야 고령화율(65세 이상)은 76.1%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.2% 수준에서 정체 전망(KREI)

< 국가별 농업 인력 고령화율(단위 : %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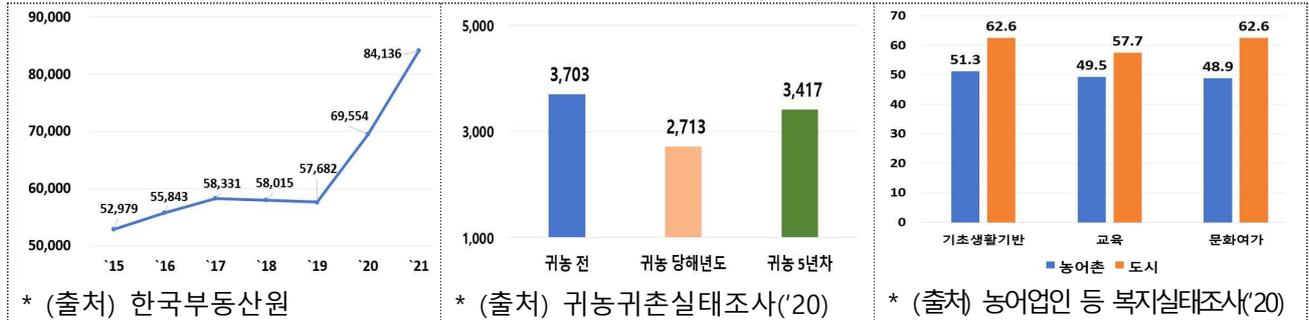
< 농가 경영주 연령별 비중 추이 및 전망(단위 : %) >



2. [정책여건] 신규 인력 유입의 장애 · 기회 요인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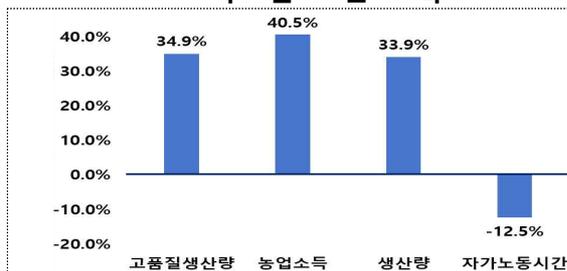
- (장애요인) 높은 초기투자 부담, 창업 후 단기간 내 정착 어려움, 도시 대비 취약한 농촌 인프라 등은 젊은 인력의 진입을 저해

< 농지 싼거래가격 추이(원/m) > < 귀농 전후 소득 비교(만원) > < 도·농간 생활여건 만족도 비교 >



- (관심확대) 한편, 최근 경제·사회적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 확대
 - 최근의 고용 회복 흐름과 함께 농림어업 취업자도 꾸준히 증가
 - * 농림어업 취업자 : ('18) 134만명 → ('19) 140 → ('20) 145 → ('21) 146
 - **코로나-19** 이후 워라벨 중시, 언택트 문화 확산 속에서 귀농 지속 증가
 - * 귀농가구 규모 : ('18) 11,961가구 → ('19) 11,422 → ('20) 12,489 → ('21) 14,347
- (기회요인) 소비·유통 트렌드 변화, 기술발전은 농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
 - 1인 가구 증가, 온라인 유통 확대와 같은 소비·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청년층 중심으로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* 창출
 - * (프레시지) 가정간편식(HMR)시장 점유율 1위, 국내 최초 밀키트 개발, 매출액 1,889억 원('21), 중기부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('20) (대표 정중교, 37세)
 - ICT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지식 배경을 가진 준비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

< 스마트팜 도입 효과 >



< 4,50세 미만 경영주 비중 >



* (출처) 스마트팜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보고서(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, '21)

Ⅲ. 그간의 정책 성과 및 한계

1. [성과] 신규 인력 유입으로 청년농 감소세 둔화

□ (신규 창업) 창업지원 강화로 신규 농업 인력 유입 확대

- '영농정착지원사업*('18~)'을 통해 초기 정착지원금과 농지·자금·교육 등을 연계지원하여 농업 분야에 외부 신규인력 지속 유입
 - *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대상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지급
 - 총 8,600명('18~'22)을 선정, 이 중 신규창업자 비중*은 지속 증가
 - * 신규창업자(비중) : ('18)680명(42.5%) → ('20) 1,051(65.6) → ('22) 1,409(70.5)
 - 초기소득 부담을 덜고 영농에 집중하여 단기간 내(최대 3년) 농업소득 증가
 - * (농업소득 선정 전: 8,976천원 → 선정 후: 15,455, (농지면적 선정 전: 6,488m² → 선정 후: 12,929
- 후계농 육성('81~)*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농업 인력 15.8만명 배출
 - *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가를 선정,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자금 지원
- 청년귀농 장기교육, 농촌에서 살아보기(프로젝트형) 등 청년 특화 귀농 지원으로 청년층의 귀농도 지속 증가* 추세
 - * 40세 미만 귀농 가구 : ('19) 1,209가구 → ('20) 1,362 → ('21) 1,507

□ (전문인력)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농업 전문인력 지속 양성

- 정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교(한농대, '97~) 졸업생은 높은 창업률과 도시근로자 이상의 농업 소득 달성
 - * 총 6,037명 졸업('00~), 영농종사율 83.6%, 졸업생 평균 소득 8,950만원(도시근로자 1.35배)
- 농업계 학교(농고·농대) 내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*으로 신규 창업 확대
 - * 창업 보육을 위한 미래농업선도고교(3개교), 영농창업특성화대학(5개교) 운영 중('17~)
 - * 농고·농대 졸업생 농업 분야 창업률 : ('17) 4.47% → ('21) 6.64
-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 신규 운영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('18~)
 - * 총 284명 수료('20~'22년), 이 중 농업 분야 창·취업율(준비자 포함)은 76.4%(217명)

⇒ 청년층 농업 창업 지원으로 청년농 감소세 둔화

* 청년농 감소율 : ('05~'10)△21.8% → ('10~'15)△56.6% → ('15~'20)△13.5%

2. [한계]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요구 지속

- (초기소득)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창업 초기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으나,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불충분
 - * 후계농업인실태조사('22) 결과 : 창업 초기 생활비 평균은 월 266만원이나 농업 소득은 월 110만원에 불과하여,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자 비율이 77.8%
 - 영농개시 전 준비 과정(평균 1.6년) 동안 소득 안정 방안 미흡
- (농지) 청년농이 정부의 최우선 농지 공급 대상이지만 높은 가격, 수요에 맞는 농지와 정보 부족 등으로 농지 확보 어려움 지속
 - 농지은행 매매지원의 경우 가격 대비 지원 금액이 낮아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층 지원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, 자부담을 지속 상승
 - * (농지가격) ('10) 23.9천원/m² → ('21) 48.0 (101%↑), (자부담율) ('10) 29.4% → ('21) 49.7 (70%↑)
 -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증가했으나, 청년농 수요 대비 공급 부족
 - *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청년농 신청 대비 지원 실적 : ('21) 1,881/4,611ha(40.8%)
- (금융) 담보·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농의 자본 투자(농지·시설 등)를 위한 금융지원 문턱이 높고, 민간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
 - 짧은 상환기간으로 월 상환 부담이 크고* 담보력 부족 호소
 - * 후계농자금 3억원 용자 시, 거치기간(5년) 이후 월 278만원(연 3,300만원) 상환 필요
 - 청년창업 전용펀드(영파머스 펀드)가 도입('20)되었으나 투자실적 저조
 - * 영파머스펀드 조성 규모 대비 투자 실적 : 58%(119억 원/205)
- (교육) 다양한 교육·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나 활용도가 높지 않고*, 콘텐츠 다양성, 현장실습 및 수준별 교육 등에 대한 현장 수요는 지속
 - * 영농과정 중 교육 이수 경험(후계농업인실태조사, '22) : (온라인) 37.5%, (오프라인) 40.4%
- (정주여건) 농업 창업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농촌 거주에 필수적인 주택* 및 자녀 보육** 등 청년층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기반 불충분
 - * 지방(수도권·광역시 제외)의 공공·민간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의 19% 수준
 - ** 농어촌 어린이집 수 : ('15) 8,216개소 → ('20) 7,111

참고

현장의 목소리

설문조사 개요

- ❖ (시기/대상) `22.3.27.~5.6. / 만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,040명
- ❖ (설문조사 수행기관) 한국 꺾럽
- ❖ (주요 설문사항) 영농경력, 영농창업기반(농자.자금.교육), 소득 관련 애로사항 등

□ 설문조사 결과(요약)

- ① (영농시작 단계 가장 큰 어려움) 영농기술 습득(31.7%), 경영자금 확보(30.4%), 농지 확보(13.4%), 기초생활비 확보(11.2%)
- ② (영농활동 중 가장 큰 어려움) 시설·농지 자금 부족(32.5%), 적은 소득(16.8%), 농지 추가 확보 어려움(12.7%), 영농기술 부족(11.4%)
- ③ (농업소득으로 생계 가능여부) 대다수(77.8%)가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,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보완(70.3%)
* 농가별 월 평균 생활비 : (초기) 266만원, (현재) 306만원
- ④ (농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) 높은 농지가격(58.9%), 마음에 드는 농지 부족(25.0%), 농지에 대한 정보 부족(14.8%)
* 평균 경작 규모 : (논) 9,624㎡, (밭) 5,456㎡, (과수원) 7,020㎡
- ⑤ (정책자금 활용) 낮은 담보와 신용도(24.3%), 보조사업의 높은 문턱(30.0%) 등으로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
* 후계농 지원사업 융자금액은 평균 1.52억원 추가로 필요한 영농자금 규모는 약 2.36억원
** 정책자금 활용처는 농지 구입·임차(58%), 시설 설치·임차(46%), 농기계 구입·임차(16%),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(4%) 순 (복수응답)
- ⑥ (정책자금 개선 필요사항) 지원자격·요건 완화(49.4%), 신청절차 간소화(41.6%), 지원금액 상향 조정(29.9%), 상환 기간 연장(25.6%)
- ⑦ (영농교육 개선 필요사항) 다양한 콘텐츠 개발(24.5%), 현장실습 연계(18.5%), 수준별 강좌 개설(12.5%), 교육 시간대 다양화(11.2%), 강사 전문성 증대(10.4%)
* (주요 이수분야) 재배·사양 84.4%, 농기계 39%, 스마트농업 35.8% 등

IV. 추진 방향

1. 목표 및 추진 전략

목표 :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 3만명 육성

전략 ①

“더 많은” 후계·청년농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확대·개편
-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
-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

전략 ②

보다 “쉽게” 농지·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.

- 농지은행 매매·임대 지원 강화
청년농 대상 농지공급물량 대폭 확대,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, 선임대 후매도 도입
- 용자조건(상환기간, 금리) 개선 ■ 정부(금융공공기관) 직접투자 펀드 조성

전략 ③

“전문농업인”으로의 “성장”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성장 단계별 맞춤형·현장형 교육 제공
-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
- R&D(기술, 판로,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) 연계 지원

전략 ④

“쾌적하고 매력적인” 농촌으로,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.

- 임대주택 확대, 농촌 보육서비스 확충
청년농촌보금자리,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
- 농촌공간 정비,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



추진체계

- 정부-지자체-유관기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
- 농업 창업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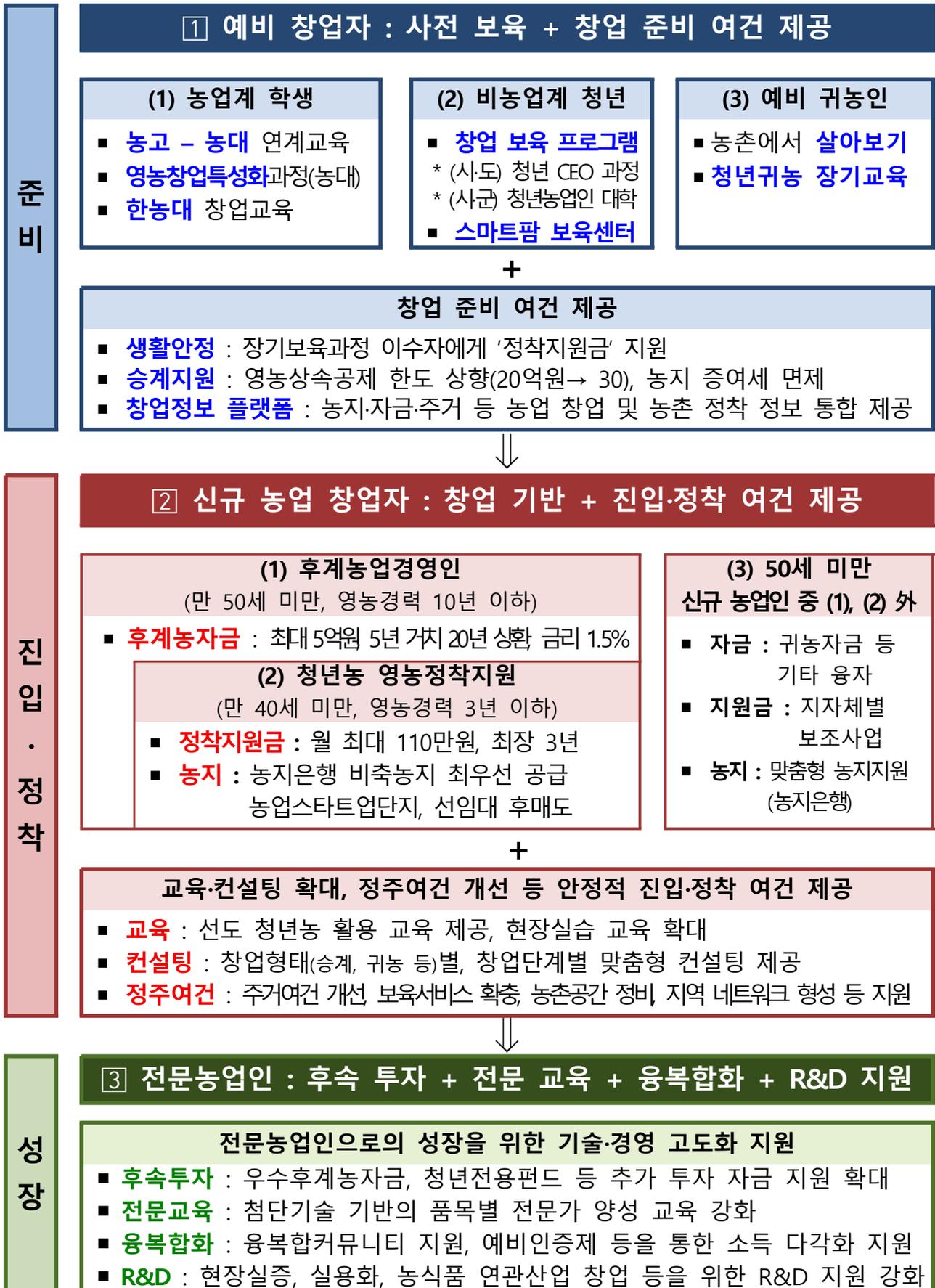
◆ **청년농 3만명+α 육성(~'27),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**

⇒ 장기적인 유입 추세(5년 평균 26천명) 유지로 **고령화율 완화, 청년농 비율 증가**

① 고령화율(40p) : (계획 이전) 76.1% → (계획 이후) 62.9 (13.2%p ↓)

② 청년농 비율(40p) : (계획 이전) 1.2% → (계획 이후) 10.0 (8.8%p ↑)

2.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



참고

청년농 3만명 달성을 위한 유입 규모 및 추이 전망

□ 연평균 5.2천명의 청년농 신규 유입으로 '27년까지 3만명 육성

○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이탈* 등 고려 시, '27년까지 총 26천여명 (연평균 5.2천명)의 신규인력이 유입되어야 3만명 달성 가능

* '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35~39세 경영주는 약 8,500명으로 각 연령별로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, 연 평균 1.7천명씩 자연 이탈 예상

○ '23년 4천명 유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유입 확대 추진

< 연도별 신규 유입 규모 및 자연이탈을 고려한 40세 미만 청년농 규모 (단위 : 명) >

	'22	'23	'24	'25	'26	'27
경영주 규모	12,400	14,700	18,000	21,300	25,600	30,000
자연이탈		1,700	1,700	1,700	1,700	1,700
신규유입		4,000	5,000	5,000	6,000	6,000

□ '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흐름을 유지하는 경우, 농업 인력 감소세 및 고령화 완화 전망(KREI)

○ 매년 5.2천명 수준 청년농 유입 시 농업 경영주 감소폭 둔화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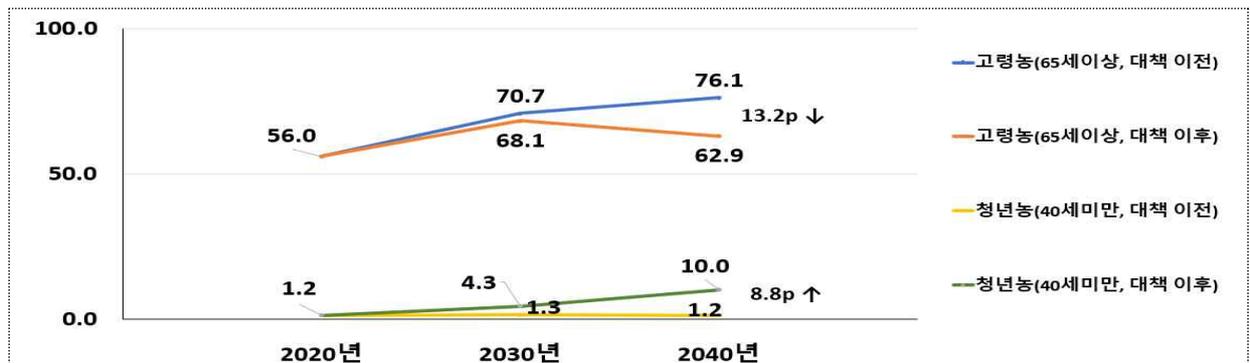
<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에 따른 농업 경영주 규모 변화 전망(KREI) (단위 : 명, %) >

	'20	'30	'40	연평균 감소율
현 추세 유지	1,035,193	944,660	795,594	△1.2
연 5.2천명 유입	1,035,193	980,325	962,477	△0.35

○ 현재의 유입 추세가 계속될 경우, 청년농 비중은 1.2% 수준에서 정체되고 고령화율은 '20년 56.0%에서 '40년 76.1%로 심화될 전망

○ 청년농 3만명 육성(~'27)을 위한 연평균 유입 규모(5.2천명) 유지 시 '40년 청년농 비중은 10.0%까지 상승하고 고령화율은 62.9%로 완화 기대

< 청년농, 고령농 비중 변화 전망(KREI) >



V. 세부 추진과제

1 [유입] 후계·청년농 지원 대상 확대

(1)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·개편으로 초기 소득 불안 완화

- ◇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대폭 확대
- ◇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및 진입조건 완화

1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단가 인상

- (지원규모)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('23~)
 - *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(안) : ('22) 2,000명 → ('23) 4,000
 - 농업경영 및 생활비 성격의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초기소득 불안정 완화
 -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농지·자금·교육 등 집중 지원
 - * (농지)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최우선지원, (자금)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으로 자동 선정, (교육)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현장교육 우선 지원

<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공 사례 : 경기 안해성 (포천딸기힐링팜 대표) >

- ▶ 서울대 지질학 석사, 현대건설 연구원 입사(AI 연구원, '14~'19)
- ▶ '19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대상 선정
- ▶ 총 6인 규모 영농회사법인 '포천딸기힐링팜' 설립('20~)
- ▶ 6,600m² 규모 딸기 스마트팜 운영, 연 수익 1억 5천만 원 ('21)



- (지원단가) 정착지원금 단가 단계적 인상('22 : 최대 100만원 → '23 : 110)
 - 최저생계비,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단가 인상
 - * 1인 가구 최저 생계비(117만원, '22), 최저임금(191만원, '22) 등 고려

2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: 진입요건 등 완화

- (지원대상) 농업 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*을 통해 영농을 병행(농업경영체 등록)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('23~)
 - * (예) 스마트팜 보육센터, 청년귀농 장기교육, 청년농부사관학교(농협) 등
- (소득기준)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,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('23~)
 - * (현행)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(중위소득 120%) 미만
(개선)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(중위소득 120%) 미만
- (농외근로) 농한기에만 일시적(3개월)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·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('23~)
 - * (현행)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→ (개선) 농업농촌 관련 근로활동 1년 내내 허용
-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, 농작업 대행 등 농업 관련 근로활동*과 농촌 지역사회 기여 가능한 활동**까지 허용하여 농외소득 확대
 - * (예) '농촌인력중개센터'를 통한 근로 제공, 농작업 대행, 농업법인 취업 활동 등
 - ** (예)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(행안부), 로컬크리에이터(중기부)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

<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 주요 내용 >

구 분	현 행	개 편
규 모	연 2,000명	연 4,000명 이상
단 가	월 최대 100만원('22)	월 최대 110만원('23~)
요 건	본인 소득, 부모 소득 모두 중위소득 120% 미만	본인소득이 중위소득 120% 미만
	농한기 일시적 허용 (3개월)	농업·농촌 관련 농외근로 허용 (1년 내내)

(2) 후계농업인 유입 확대

- ◇ 후계농업인 및 우수후계농업인 지원 규모 확대
- ◇ 승계 활성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상향 등 세제 지원

1 후계농업인 및 우수후계농업인 육성 규모 확대

- (후계농) 후계농업경영인*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**('23~)
 - * 만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영농자금 융자 지원
 - ** ('22) 3,000명 → ('23) 5,000
- (우수후계농)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('23~)
 - * ('22) 300명 → ('23) 500
 -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 종사 중인 사람 중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자금보다 1%p 낮은 금리의 추가 융자 제공

2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

- (상속공제) 승계농의 영농상속 시 공제가액* 상향(20 → 30억원, '23~)
 - * 농업인이 자녀에게 영농자산(농업관련 건축물 및 부속토지)을 상속하는 경우 기초 공제 및 인적공제에 영농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과세표준 결정
 - 주요 상속 자산인 농지 가격 상승*,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** 등을 고려, 영농상속공제 가액 상향
 - * (농지 실거래가 추이) ('18) 58,015원/㎡ → ('22) 84,136
 - ** (가업상속공제)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400~1,000억원으로 개정 예정('23~)
 - 축산 농가 승계 활성화를 위해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(기재부 협의)
- (증여세 면제)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항 일몰 연장('23~)
 - * 당초 '22.12.31까지 적용. 일몰기한 3년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개정)

(1) 농지은행의 매매·임대 지원 기능 대폭 강화

- ◇ 비축·수탁 물량 확대로 공급 가능한 농지 최대한 확보
- ◇ 농지 매매·임대 방식 다양화로 청년농 맞춤형 농지 공급체계 구축
- ◇ 청년농이 농지거래 시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강화

< 청년농 농지 공급 필요 규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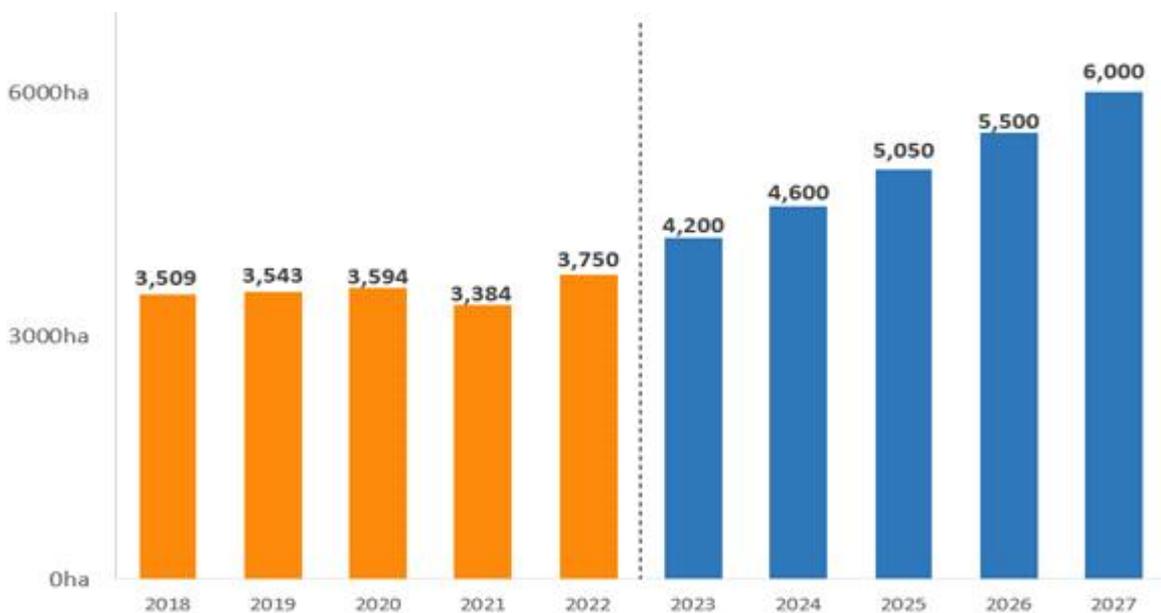
- ◆ '18~'22년 동안 공급한 17.8천ha 대비 **42% 증가한 25.3천ha** 공급 필요
- '23~'27년 동안 **신규 유입 청년농 16.9천명*** 1인당 **1.5ha**** 농지 공급 가정
- * 신규 유입 대상 청년농 26천명 중 승계농(신규 유입 청년농의 35%) 제외 (농경연 '21.10월)
- **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40세 미만 경영주 1인당 평균 경작면적 : 1.56ha ('20, 통계청)

(단위:ha)

구분	'22년	청년농 농지 공급 필요 규모('23~'27)					소계
	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
면적	3,750	4,200	4,600	5,050	5,500	6,000	25,350

< '17~'22 > 맞춤형 농지 청년농 공급 : 17,780ha

< '23~'27 > 신규 청년농 필요농지* : 25,350ha



* 맞춤형 농지지원 + 간척지 공급 + 민간 거래 등 정부·민간 자원 활용 공급 필요 물량

1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물량 대폭 확대

○ (비축농지)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은행의 농지 비축물량 확대

- (매입대상) ①간척지와 ②비농업인 소유 '96년 이전 취득농지(844천ha), ③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(124천ha)까지 비축농지 매입대상으로 확대^{신규}

*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('23.상)

<기존>	>>>	<확대>
비축농지 매입대상		비축농지 매입대상
은퇴농 농지, 이농·전업농 농지, 상속농지, 매수청구 등	➔	기존 + <u>간척지, '96년 이전 취득농지, 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</u>

- (단가) 청년농 선호 농지 매입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단가 인상

* 매입단가 : ('22) 388백만원/ha → ('23) 408백만원/ha

○ (지원한도) 청년농이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 한도 상향('22.9~)

< 진입 단계 (2ha 미만, 영농경력 2년 이하) >

맞춤형 농지지원 사업	지원한도	
	현행	개선
비축농지+농지매매 +농지임차임대	2ha	3ha

< 성장 단계 (2ha 초과, 영농경력 2년 초과) >

맞춤형 농지지원 사업	지원한도	
	현행	개선
비축농지	4ha	6ha

- 청년농이 농지은행에 희망농지의 매입 또는 임차를 요청할 경우 **공고절차**(농지은행포탈)를 생략하여, 경합 없이 확보 가능한 여건 조성

○ (임대수탁) 청년농이 희망할 경우 비농업인 등이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한 농지를 최대 **4ha**까지 공급('22.하~)

* '21년 8.6%(1,503/17,550ha) 수준인 수탁농지 청년농 공급 비율을 '27년 15%까지 확대

○ (은퇴직불) '경영이양직불제'를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로 확대·개편 검토

* 연구용역, 포럼 등을 통해 '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방안' 마련(~'23.상)

-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 시 직불금*을 지급하고 청년농에게 이양 농지 우선 지원 추진('24~)

*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기대수익(농업 순수익, 농업보조금)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 설정

2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여 최장 30년 임대

- (유휴농지) 국·공유지 등 유휴농지 매입 후 생산기반을 정비*,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·매도(23. 6ha)^{신규}
 - * 진입로, 경지정리, 관정, 용·배수로 등 시설 농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
- ①단지 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최장 30년간 임대하거나,
②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기임대 또는 매도
- 임대형 스마트팜, 청년 보금자리주택(임대주택)과 연계하여 조성

< 유휴농지 활용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(안) >



< 유휴농지 매입 및 정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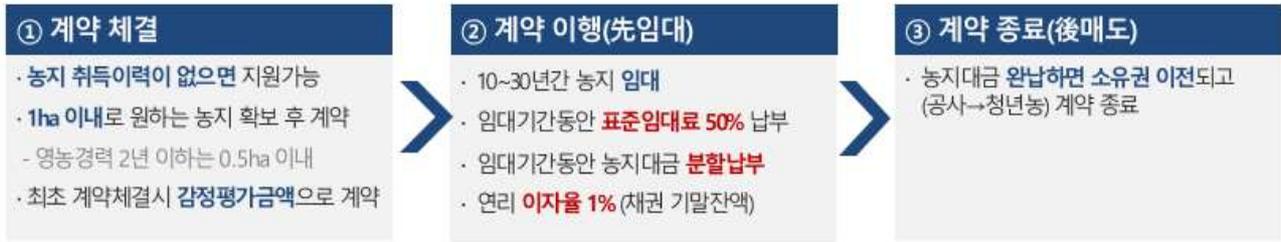
< 스타트업단지 + 임대형 스마트팜 + 청년 보금자리주택 설치 >

- (비축농지) 농지은행 비축농지 중 스마트팜 수요가 높은 지역의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(23, 6ha)
 - *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청년농의 경영성과, 영농의지 등을 평가하여 재임대(최장 10년)

3 선임대-후매도 등 청년농 농지 매입 지원 강화

- (先임대-後매도)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이후 매입 가능한 '先임대-後매도' 방식 도입(23 : 20ha)^{신규}
 - 1인당 지원 한도는 1ha 이내(영농경력 2년 이하 : 0.5ha 이내)로 한정
 - 최초 계약체결 시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여 임대기간 동안(10~30년)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,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

< 농지 先임대-後매도 사업 주요내용 >



* 최초 계약체결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농지대금 조기 납부 시 농지 취득 가능

- (매입 단가·규모)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구매 희망 농지를 원활히 매입하도록 지원 단가* 및 규모 확대**('23~)
- * 청년농·생애첫농지취득 지원단가 : ('22) 154백만원/ha → ('23) 254(65%↑)
- ** 청년농·생애첫농지취득 지원규모 : ('22) 100ha → ('23) 140
- 청년농·생애첫농지취득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농 지원을 위해 **자부담액 농신보 보증(최대 3억원) 지원('22.9~) ^{신규}**

4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정보 제공 확대

- (농지 거래정보) 청년농이 농지 거래 시 활용 가능하도록 농지 실거래가, 공시지가, 임차료 정보 제공 강화('23.상~)
- 농지실거래가 정보 제공주기 단축(매분기 → 매월)
- 농지임차료 정보제공단위 세분화(시군구(논·밭) → 읍면동(주요 작물))

<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가격 및 농지임차료 제공 정보 개선(안) >



- (유휴농지 정보) 국·공유농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청년농이 해당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('23.상~) ^{신규}
- * 일정 : 국·공유농지 현황 조사('22.6~11) → 현황 조사 결과 확정('22.12) → 캠프(국유지)·지자체(공유지) 농지정보 공개 협의를 거쳐 공개('23.상)

참고

농지 공급 확대 방안

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		현행	개선
맞춤형농지 공급			
• 비축농지 임대	농지은행 매입범위	상속농지	'98년 이전 취득농지, 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 추가
	매입단가	간척지 매입 제한	기 매입 비축농지 인접 간척지 매입 허용
	매입규모	'22: 388백만원/ha	'23: 408백만원/ha
	임대기간	'22: 1,800ha	'23: 1,875ha
• 청년농 농지 매입	농업용 시설물 설치시 10년	농업용 시설물 설치시 25년(농신보 보증시)	
	지원단가	'22: 154백만원/ha (잔액은 자부담)	'23: 254백만원/ha (잔액은 농신보 보증 가능)
• 청통사향(지원한도)	지원규모	'22: 100ha	'23: 140ha
	진입단계	2ha	3ha
•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(신규)	성장단계 (비축농지)	4ha	6ha
	사업규모		'23: 6ha
•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(신규)	지원방식		① 단지 내 스마트팜 시설 설치 후 최장 30년간 임대 ② 스마트팜 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장기임대 또는 매도
	사업규모		'23: 6ha
• 비축농지 비닐온실 설치 임대 (신규)	지원방식		10년 임차 (평가를 거쳐 10년 재임차)
	사업규모		'23: 20ha
• 先임대-後매도 (신규)	지원방식		10~30년 장기임차 및 농지대금 완납 후 농지소유권 취득
	사업규모		
임대수탁농지 공급			
• 임대수탁농지 임대	대상자	임대인 선택 우대	청년농 우선 지원
	지원한도	-	최대 4ha

(2) 젊은 인력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강화

- ◇ 상환·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용자 부담 최소화
- ◇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력에게 과감한 펀딩 제공

1 후계·청년 인력 대상 용자 지원 강화

- (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*) 시설자금 상환기간 최대 25년까지 확대, 일시적 경영 위기 시 상환 유예(1년, 최대 3회) 신설('23~)
 - * (주요내용)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 대상으로 최대 30억원의 시설·개보수, 운전 자금 용자 지원(금리 1~1.5%, 농신보 90% 우대 보증)
 -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일정 규모 이상 대출 시 자부담 규모 축소
 - * (현행) 총 사업비 10억원 이하 100%, 10억원 초과 90% 이내 대출
(개선) 10억원 이하 100%,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95%, 15억원 초과 90% 이내 대출

< 청년 스마트팜 육성자금 활용 우수 사례 : 충남 서원상 (그린몬스터스 대표) >

- ▶ 서울과기대 기계공학 석사, LG전자 연구원 입사('15)
- ▶ '18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 지원대상 선정
- ▶ '20년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용자 지원(10억원)
- ▶ 약 5,500m² 규모 오이 스마트팜(유리온실) 운영
- ▶ 미니오이 등 생산, 연 매출 4억원('21)



- (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) 금리 인하(2% → 1.5), 상환기간 확대 (최대 25년) 및 지원 한도 상향(3억원 → 5)('23~)

< 금리 인하, 상환기간 확대에 따른 1인당 연 평균 상환 부담액 >

- 상환기간 확대, 금리 인하로 1인당 연 평균 상환액 45.4% 감소(3억원 대출 가정)

구분	상환기간	금리	연 평균 상환액(월 평균)
현행	5년 거치 10년 상환	2%	3,330만원(월 평균 277.5만원)
개선	5년 거치 20년 상환	1.5%	1,815만원(월 평균 151.3만원)

-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도 인하(1% → 0.5)

- (컨설팅) 대출 실행 단계에서 판로·경영 등에 대한 1:1 컨설팅을 제공하는 '영농 네비게이터'를 농촌지역 농협 내 확대 운영('23~)

* (영농네비게이터 운영 규모) : ('22) 50명 → ('23) 100 → ('27) 300

- (경영안정) 청년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희생자금* 지원요건 완화('23~)

* 일시적 경영 위기 농업인에게 기존 농업용 부채를 저리 자금으로 대환(고정 1% 5년 거치 7년 상환)

- 전년대비 생산, 매출, 판매량 감소율 등 경영희생자금 지원기준을 청년농은 5%p 차감하여 적용(15%→10)

< 후계·청년농 대상 융자지원 주요 개선사항 >

구 분		현 행	개 편
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	상환기간	5년 거치 10년 상환	5년 거치 20년 상환
	상환유예	-	일시적 경영위기시 1년간 상환 유예 (최대 3회)
후계농 자금	상환기간	5년 거치 10년 상환	5년 거치 20년 상환
	금리	연 2%(고정금리 시)	연 1.5%(고정금리 시)
	지원한도	최대 3억원	최대 5억원
우수후계농 자금	금리	연 1%(고정금리 시)	연 0.5%(고정금리 시)
경영희생 자금	지원요건	생산량, 매출액 등 전년 대비 15% 이상 감소	생산량, 매출액 등 전년 대비 10% 이상 감소

2 임대 농지 내 시설물 설치 시 농신보 보증 강화

- (임대기간) 농지 임대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(기존 5~10년)한 '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' 장기임대 상품 도입('23~) ^{신규}

* 최소 15년부터 최대 25년까지 개인 수요에 맞춰 임대 기간 선택권 부여

- (보증제공) 15년 이상 장기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 시, 근저당권(지상권)이 없더라도 농신보 보증 제공('22.9~) ^{신규}

* (기존)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정책자금 대출 불가

- 농지은행 임대 농지 외 개인 간 합법적 임대계약도 포함하여, 청년농의 시설물 설치 자금 확보 뒷받침

3 청년농의 성장·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투자 확대

- (영파머스펀드) 청년농 전용펀드 규모 확대 및 융복합 투자 지원('23~)
 - '27년까지 총 1,000억원 추가 조성*, 농·축산물 가공·유통 등으로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청년농까지 투자대상**에 포함
 - * 조성규모 : ('20~'21) 205억원 → ('22~'27) 1,000억원 추가 조성
 - * 투자대상 : (현행) 1차 생산에 종사하는 청년창업농 등 → (개선) 1차 생산 + 가공유통 등

- (직접투자) 생애 첫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사업 자금을 담보 없이 직접투자(농업정책보험금융원, '23~) 신규
 - 기존의 재무성과·수익성 위주 민간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·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(경영체당 최대 2억원)
 - *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 보완 완료('22.8월), 연 30억원 규모로 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조합 조성 추진('27년까지 150억원 이상 조성)
 - 성장 및 후속투자를 위해 후속투자 운용사에 추가 인센티브* 제공, 청년농 대상 전문보육 프로그램 병행 등 추진
 - * 타 펀드 운용사가 직접투자를 받은 경영체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% 지급

- (정보제공) 투자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('23.6월), 사업설명회 확대 (연 2회→4회) 등을 통해 청년-투자자 간 정보교환 강화('23~) 신규

< 청년농 관련 농식품펀드 주요 개편 내용 >

구 분		현 행	개 편
영파머스 펀드	투자대상	1차 생산 한정	가공·유통 등 포함
	조성규모	누적 205억원 조성	1,000억원 추가 조성(~'27)
직접 투자	투자대상	-	생애 최초 투자유치 희망 청년농 대상 직접투자 (무담보, 최대 2억원, '23~)
	조성규모	-	연 30억 원, '27년까지 150억원 이상 조성
정보 제공	플랫폼	기관별 투자 정보 산재	통합정보 플랫폼 구축('23)
	사업설명회	연 2회 개최	분기별 1회 이상 개최

(1) 성장 단계별 다양한 맞춤형·현장 교육 제공

- ◇ 청년농 육성 규모에 맞춰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규모 대폭 확대
- ◇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현장실습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

<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 규모 >

◆ '23~'27(5년)간 청년농 및 예비청년농 대상 최소 13.8만명 교육훈련 필요*

- 40세 미만 경영주 및 차년도 창업 준비 예비청년농 대상 연 최소 1개 이상의 교육 지원 가정
(단위:명)



구분	'22년	교육훈련 목표('23~'27)					소계
	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
합계	16,400	19,700	23,000	27,300	31,600	36,000	137,600
창업자	12,400	14,700	18,000	21,300	25,600	30,000	109,600
예비창업자	4,000	5,000	5,000	6,000	6,000	6,000	28,000

* (진입 준비) 한국농수산대학교, 영농창업특성화과정, 농업계학교,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+ 민간교육 등

* (영농 정착) 영농정착지원대상자 필수교육, 청년CEO 양성, 청년농대학, 청년강사 양성, 멘토링 등 + 민간교육 등

1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농의 영농 기초역량 강화

- (영농창업특성화대학*) 현행 5개교**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 - *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개설·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을 육성(16~)
 - ** 연암대(천안), 충남대(대전), 전북대(전주), 전남대(광주), 경북대(대구)
- 졸업 후 농업 분야 취·창업 지원을 위한 디딤돌 프로그램* 도입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연계 강화
 - * 진로 탐색, 창업동아리 활동, 산학협력 취·창업 매칭 등 사후관리 지원

○ (한국농수산대) 재학생 창업 지원 강화 및 창업 교육 민간 개방

-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재학생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 컨설팅 및 연구모임 등 창업 연계지원 도입('23~) 신규
- 농업 진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농 아카데미 과정* 교육대상을 재학·졸업생에서 일반 청년농까지 확대**('23~)

* 한농대 재학생, 졸업생 대상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(4단계, 총 20과정 운영 중)

구분	공통	예비 단계	창업 단계	성장 단계
세부내용	법률세무경영 이론 등	농지확보, 사업계획서 작성 등	농자자금, 스마트팜, 유통·마케팅 등	리더십, 멘토링, 신제품 개발 등

** 한농대 청년농 아카데미 교육대상 : ('22) 13백명 → ('23) 15 → ('27) 30

○ (농업계 학교) 영농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실습 중심 교육 강화('23~)

- 농고·농대생 영농창업 원팀 프로젝트*를 통해 창업 로드맵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 등 수행을 통해 영농창업으로 유도('23~) 신규

* 미래농고 3~5명과 특성화대학 2명이 팀을 이뤄 창업 아이디어 발굴, 영농창업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 실전형 프로젝트 운영(4~6개월)

** '23년부터 10개 팀 50명 시범운영 후 확대

- 첨단기술공동실습 등 현장실습 교육의 농고·농대생 비중*을 높이고, 한농대 '새만금 스마트농업 실습장'을 확대**하여 농업계학교와 공동 활용

* 현장실습 교육생 중 농고·농대생 비중 : ('21) 43%(1,493/3,453명) → ('23~) 50%

** ('22~23) (노지 스마트팜, 3ha) → ('26) (밭작물, 시설) → ('27) (조경, 화훼)

○ (스마트팜 보육센터) 선도농가 실습 교육 도입,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연계 지원으로 실전형 예비 창업교육 강화

-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 이후 선도농가 매칭으로 현장경험 확대 및 기술·경영 역량 이전 기회 제공('23~) 신규

* '23년 20명 규모 시범 운영 후,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

-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여 수료생 및 청년농 우선 입주 지원

* '27년까지 15개소(혁신밸리 4, 지역특화 임대팜 11) 조성으로 연간 126명 청년창업 지원

2 원할한 농업 진입을 위한 창업 초기 교육·컨설팅 강화

- (영농정착지원 대상) 사전 교육 확대 및 유형별 맞춤형 교육 도입
 -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규모 확대에 따라 교육인원을 확대*하고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(승계·창업) 맞춤형 교육 도입('23~)
 - *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인원 : ('22) 5,400명 → ('23) 7,800

- (컨설팅) 청년농 대상 창업·투자 심층컨설팅* 확대
 - * 농업투자 계획 중인 만 49세 이하 농업경영체 대상 컨설팅을 통해 투자실패 최소화
 - 청년농 유형(승계농, 귀농 등)에 맞춰 컨설팅 분야를 세분화하고,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성장단계(창업→사업확대)별 지원

< 창업 유형별 교육·컨설팅 주요 내용 >

창업 유형		주요 내용	
	승계	■ 상속·증여 관련 세무·회계 절차, 부모·자녀 간 경영상 갈등 해소	
신규 창업	농업계 졸업	■ 재배 기술 고도화, 융복합화	■ 창업기반(농자자금 등) 마련 방안 ■ 지역 정착 방안(거주, 네트워크 형성)
	비농업계 졸업	■ 농업 기초 역량, 품목별 특성	

- (지역별 교육) 시·도, 시·군별 농업 교육기관을 활용한 청년농 창업 전문 교육과정 확대
 - 9개 권역별 마이스터 대학을 활용한 품목별 장기 교육과정(1년)인 '청년농업 CEO 양성 과정' 신설('23 : 200명) 신규
 - * 청년 선도농 중 150명을 선정, 멘토링 풀을 구축하여 선후배 간 토론식 현장학습
 - ** 교육 시간대(야간·주말 등) 다양화를 통한 청년농의 교육 접근성 향상
 - 시·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역특화 품목 실습 및 경영·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'청년농업인대학' 운영 규모 확대*(농진청)
 - * 청년농업인 대학 운영 규모 : ('22) 21개소 → ('23) 30
- (스마트팜) 창업 초기 '단기형(2~6개월) 실습 교육' 대상에 청년농 비중을 확대*하고, 영농기술 수준 진단**을 통해 창업 경로 설계 지원
 - * 교육대상(연간 180명) 선발 시 청년, 보육센터 수료생 비중을 확대('23: 10% → '27: 30)
 - **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ICT기반 영농·경영역량 측정(총 4단계)

3 전문성과 변화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성장 지원

- (전문성) 첨단기술 기반의 품목 전문가 양성체계 운영('23~)^{신규}
 - 첨단 재배 기술과 ICT 역량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품목별 전문교육* 확대
 - * 첨단기술품목특화전문교육,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 등
 - 주요 품목*별 재배기술과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**로 양성하여 신규 청년농 대상으로 품목별 강의 제공
 - * ('23) 5개 품목(토마토, 딸기, 멜론, 한우, 양돈) 20명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
 - **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'청년실습 전문교수(가칭)' 운영 근거 마련
- (변화관리) 창농 후 문제해결을 위한 멘토링, 학습공동체 확대('23~)
 - 기초에서 중급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, 선도농을 활용하여 청년농 농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1:1 멘토링 지원 규모 확대
 - * 1:1 멘토링 운영 규모 : ('22) 250명(멘토 60명) → ('23) 300(멘토 80)
 - 청년농이 자기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학습공동체(10~20명) 지원 확대*
 - * 학습공동체 운영 규모 : ('22) 12개소 → ('23) 15 → ('27) 60

4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제공

- (플랫폼) 청년농 맞춤형 농업교육정보 통합 제공 추진^{신규}
 - 청년농 선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대*하고, 분산**된 농업 교육 정보를 농업교육포털(농정원)에 통합하여 청년농 관심 정보 원스톱 제공
 - * 과정/수료인원(청년) : ('21)235개/514(176)천명 → ('22) 400/600(200) → ('23) 420/650(230)
 - ** 전체 190개 교육기관 중 63개만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통합 관리('21년 기준 33.2%)
- (성장관리) 청년농 쉰 생애주기 성장경로관리 서비스 제공('24~)^{신규}
 - 학습행동, 교육이력, 성취도 등의 정형·비정형 데이터를 표준화한 마이데이터 구축을 통해, 개인별 역량기반 맞춤 학습경로 설계
 - * ('22) 개인별 교육 이력 관심사항 DB 축적 → ('23) DB 표준화, 시스템 개선 → ('24) 맞춤형 서비스 제공

(2) 국내·외 온·오프라인 판로 및 융복합화 지원

- ◇ 국내외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
- ◇ 융복합 사업자로의 성장을 통한 소득 다각화 지원

1 국내외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 확대

- (온라인)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수수료 지원을 통한 입점 확대, '라이브커머스' 활용 기회 제공을 통한 판로 뒷받침('23~) ^{신규}

* (온라인스토어 입점) ('22) 145농가 → ('27) 1,500(누적) (라이브커머스) ('23) 30농가 → ('27) 350(누적)

< 라이브 커머스 매출 향상 사례 : '20년 청년의 날 기념 프로모션('20.9) >

- ▶ (참여 농가) 청년농업인 총 6개 농가
- ▶ (주요 품목) 딸기잼, 감자, 파프리카, 사과, 작두콩 차 등
- ▶ (지원사항) 촬영, 쇼호스트, 장비 및 할인쿠폰 지원
- ▶ (매출액) 프로모션 후 농가 별 1주간 온라인 매출액 : 482만원
* 프로모션 전 주 단위 온라인 평균 매출액 8.3만원



- (오프라인) 농협·민간 식품기업과 협업 등을 통한 판로지원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('23~)

- 하나로마트 입점 수수료 인하(일반 판매자 대비 50% 수준), 계약 간소화* (농협) 및 식품·외식업체와 청년농 생산자 단체의 계약재배 지원

* 입점신청 전 자체평가 및 공장실사 생략, 제출서류 간소화(13종 → 5종), 총 1,000명 지원(~'27)

- 현직 대형 유통망 MD(한국 MD 협회)의 유통 채널별 연계 코칭을 통해 제품 론칭까지 지원하는 지역별 '청년 MD' 육성 프로그램 확대(농진청)

* 청년 MD 육성 프로그램 운영 규모 : ('22) 26명 → ('23) 40

- (수출) 우수 청년농업법인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('23~) ^{신규}

- 우수 청년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정보, 수출 규정 및 통관 정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유망 제품 시범 수출과 홍보를 지원(20개소, ~'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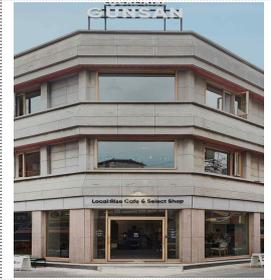
2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 다각화 지원

- (창업가 육성) 민간 창업가 육성기업(엑셀러레이터)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의 농촌 융복합 창업 커뮤니티를 지원*('24** 신규)

* 융복합 예비창업자 모임과 연계하여, 창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1:1 컨설팅

< 농촌 융복합 창업가 육성 사례(민간) : 로컬라이즈 군산 >

- ▶ SK E&S와 언더독스(창업가 육성 사회적기업) 공동 추진
 - ▶ 거점 공간(로컬라이즈 타운)을 기반으로 맞춤형 창업 교육
 - ▶ 군산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, 업무제품홍보 공간 등을 제공
 - ▶ 잠재력높은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 1:1 창업코칭 및 사업비 지원
- * 26개 소셜벤처(특화 관광, 로컬푸드 도시락, 지역영상·사진 제작 등)



- (인증) 유망 경영체를 인증하여 컨설팅·판로·홍보 등 맞춤형 지원('23~)
 -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예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컨설팅, 시·도 안테나숍 입점 등을 지원하고 본 인증 시 가점 부여
 - * 40세 미만 융복합 인증 사업자 : ('22) 156개소(6.8%) → ('27) 281(10%)
 - ** 예비 인증 사업자 : ('22) 50개소 → ('27) 150

< 융복합 인증 형태별 주요 내용 >

구분	인증제	예비 후보군
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'예비후보군' 요건 + 사업성과(매출액) 요건 * 사업체 역량, 발전 가능성(창의성) 등이 예비인증 경영체에 비해 우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'인증 요건 중 ①주체(농업인법인 등), ②입지(농촌 지역), ③주원료 지역산 비율(50% 이상) 충족
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기 및 장기(최대 1년) 컨설팅 지원 ◦ 중앙·지역단위의 판로지원 * 온라인 쇼핑몰(네이버, 우체국 등), 안테나숍, 수도권 판매관(송파, 광고)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기 컨설팅 1회 ◦ 시·도 안테나숍(지역 72개소) 입점 지원 ◦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

- (자금) 사업 초기 청년농에게 필요한 시설·운영 자금 지원 강화
 -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의 상환기간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하고, 대상자 선정 시 청년 우대(가점 부여)

(3) 청년농의 농업분야 R&D 참여 및 활용 기회 확대

◇ ①현장실증 → ②실용화 → ③창업으로 이어지는 R&D 연계지원 확대
* R&D 예산규모 : ('22) 156억원 → ('23) 243억원 → ('27) 332억원

1] 청년농의 R&D 참여 기회 확대

- (실증연구) 청년농이 참여 가능한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, 참여 기회(리빙랩* 등) 확대**
* 드문모심기 재배기술, 가공용보리 신품종 실증 등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 마련
** 청년농 현장실증 참여 규모 : ('22) 15과제, 70명 → ('23) 20, 85
- (현장실습) 연구 현장 단기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제* 도입 및 농과계 대학생의 국가연구기관 현장실습(연 120명) 추진('23~)^{신규}
* 스마트·친환경·치유농업 등 연구현장 경험(1~3개월 운영, '23년 20명 선발)

2] R&D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

- (실용화) 청년농의 농업기술 실용화 및 특허출원 지원 확대
 - 농진청 등에서 개발한 우수 R&D 성과를 이전받거나, 자체 개발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산업체의 실용화 초기 비용 지원 확대
* 청년농 농업기술 실용화 지원 규모 : ('22) 99과제 → ('23) 120
 -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특허출원 지원*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**
* 청년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, 시제품 제작과 특허출원 비용 지원
** 청년농 특허출원 지원 규모 : ('22) 27명 → ('23) 40
- (창업) R&D 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강화
 - 농진청 연구실-한국농업기술진흥원-스타트업(설립 7년이내)이 연계하여 핵심기술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'1과 1스타트업' 운영('23~)^{신규}
* '23년 시범 사례 2~3개소 발굴·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
 - R&D 성과·국유특허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'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(과제별 0.5억원)' 지원 규모 단계적 확대

(1) 청년층이 필요한 주거·보육 서비스 확충

- ◇ 청년농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
- ◇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

1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한 청년농 주거 안정 지원

- (보금자리) 귀농·귀촌인 등 농촌 청년 대상 '청년농촌보금자리' 확대('23~)
 - * 조성규모(누계) : ('22) 5개소(괴산, 서천, 고흥, 상주, 밀양) → ('23) 9
 - 농촌 청년층을 타겟으로 보육·문화·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단지(개소당 30호 규모) 조성 확대
 -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과 통합지원을 통해 창업, 보육, 주거를 연계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

<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: 상주시(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) >

- ▶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을 조성, 귀농·귀촌 청년의 주거·보육 부담 완화 및 농촌정착 지원
- * '22년 5월부터 현재 25세대 입주 / 총 사업비 8,025백만원
- ▶ 단지 내에 북카페, 공동보육실 등 문화·보육 시설과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간 소통 강화



- (정착초기) 임시 거주 가능한 귀농인의 집* 조성 확대**('23~)
 - * 임대료(월) : 10~30만원, 임대기간 : 최대 24개월(빈집형 : 24개월, 유휴숙박시설 : 12개월)
 - ** (빈집형) ('22) 420개소 → ('27) 950 (유휴숙박시설형) ('23) 10개소 → ('27) 60
 - 귀농·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처로 활용

- (진입준비) ‘농촌에서 살아보기’* 참여 마을 지속 확대(‘23~)
 - * 최장 6개월간 주거·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연계 지원
 - 특히, 만 40세 미만 청년 대상 특화된 ‘프로젝트 참여형’ 운영 확대
 - *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 일자리, 활동(예: 지역농산물 온라인 판로 개척, 마을 축제 기획·운영, 마을 굿즈 개발 등)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참여 기회 제공
- (주택개량) 농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* 시 청년농은 기준 금리**에서 0.5%p(2%→1.5) 우대(‘23~)
 - * 농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또는 농촌이주자 대상으로 자금 지원(신축 : 2억원, 증축·수선 : 1억원)
 - ** 고정금리 2.0%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담보를 전제로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

2 농촌 특화 돌봄 서비스 확대

- (국공립 돌봄) 국공립 어린이집 및 소규모 돌봄 시설 확대(‘23~)
 -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육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지역 내 거점 읍·면을 중심으로 확충(연 30개소)
 - 소규모(3~20인 이하) 국공립 돌봄시설(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*)을 돌봄 시설이 부족한 읍·면에 지속적으로 확충**
 - * 리모델링·신축비,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, 교재·교구비, 냉·난방비 등 지원
 - **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규모 : (‘22) 98개소 → (‘23) 103개소
- (주말돌봄) 주말에도 농작업이 필요한 농업 특성을 고려하여, 주말 돌봄을 제공하는 ‘농번기 아이돌봄방’ 확대(‘23~)

<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사례 : 함안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>

- ▶ ‘14년부터 현재까지 농번기아이돌봄방을 정기적으로 운영(농번기 4~6월, 9~11월 운영, 아동 15명)하고 있어, 지역 청년농들에게 농번기 보육시설로 자리매김
- ▶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안정된 놀이공간, 급간식 및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제공



- (이동식 놀이교실)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방문하여 도서·장난감을 대여하는 ‘이동식 놀이교실’ 지속 운영(‘23~, 연 13개소)

(2) 농촌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,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

- ◇ 청년농에게 매력적인 공간 조성 및 편의 기능 확대
- ◇ 지역 청년농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기적 정착 생태계 형성

1 청년농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정비

- (유해시설 이전)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으로 청년농이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 여건 조성('22~)
 - 주거지역에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악취·소음 유발 및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 지원
 - * 공간정비사업 운영 규모 : ('22) 45개소 → ('23) 85(누적)
- (생활환경 개선)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농 등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·위생 등 생활 인프라 및 환경 개선 지원 확대
 - *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운영 규모 : ('22) 449개소 → ('23) 529개소
 - 마을안길, 상하수도, 마을회관, 재래식 화장실 등 주민 이용도가 높고 안전 확보 필요성이 큰 인프라 시설 정비
- (생활 SOC) 농촌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교육·복지·문화 서비스 등 생활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설립 확대

< 농촌 생활 SOC 시설 복합화 사례 : 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>

- 하나의 건물에 각 층별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설을 복합화
 - ▶ (1층) 면사무소, 보건지소(진료실), 도서관(어린이 자료실), 장난감 도서관
 - ▶ (2층) 보건지소(치매 쉼터), 도서관(디지털 자료실, 일반열람실 등)
 - ▶ (3~4층) 문화복지센터(다목적 강당, 독서실, 취미 교실 등)



- 읍면 주민 수요조사 등을 고려하여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거점 조성 지원
 - * 생활SOC 확충 조성 개소수(착수) : ('22) 797개소 → ('23) 900(누적)

2 지역 안착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

- (커뮤니티) 선·후배 청년농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생산 등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('23~) ^{신규}
 - * (활동예시) 품목별 재배 기술 공유, 타 품목 간 크로스 코칭, 지역 내 청년농 제품 공동 브랜드화,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
- '23년 5개소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 확대
- 지자체 담당자-전문가 매칭, 지역 거점 활동공간 확보 및 활동비 지원, 커뮤니티 간 교류 활동 등 후속 활동 지원* 등 추진

< 청년농 커뮤니티 대상 주요 인센티브 제공 방안 >

구분	주요 내용
전문가 매칭	▶ 주요 활동 계획(정보공유, 공동생산 등)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매칭 지원
활동비	▶ 농촌 지역 유희시설을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,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(개소당 연 1천만원)
후속 활동	▶ 커뮤니티 상호 벤치 마킹을 위한 공동 워크숍, '우수 커뮤니티 선발 컨테스트' 개최 등을 통해 성과 확산 및 후속 활동 지원

< 청년농 커뮤니티 운영 사례 : 전남 장성군 '농사덕분' >

- ▶ '18년 블루베리, 샤인머스켓, 복숭아, 조경수, 새싹인삼 등 각기 다른 품목의 청년농 9명으로 구성하여 활동 시작
- ▶ '19년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경진대회(농진청) '대상' 수상
- ▶ 공동브랜드 '농사덕분' 상표 등록·운영 중
- ▶ 다른 품목 간 크로스 코칭을 통한 부족한 부분 보완, 상호 협력을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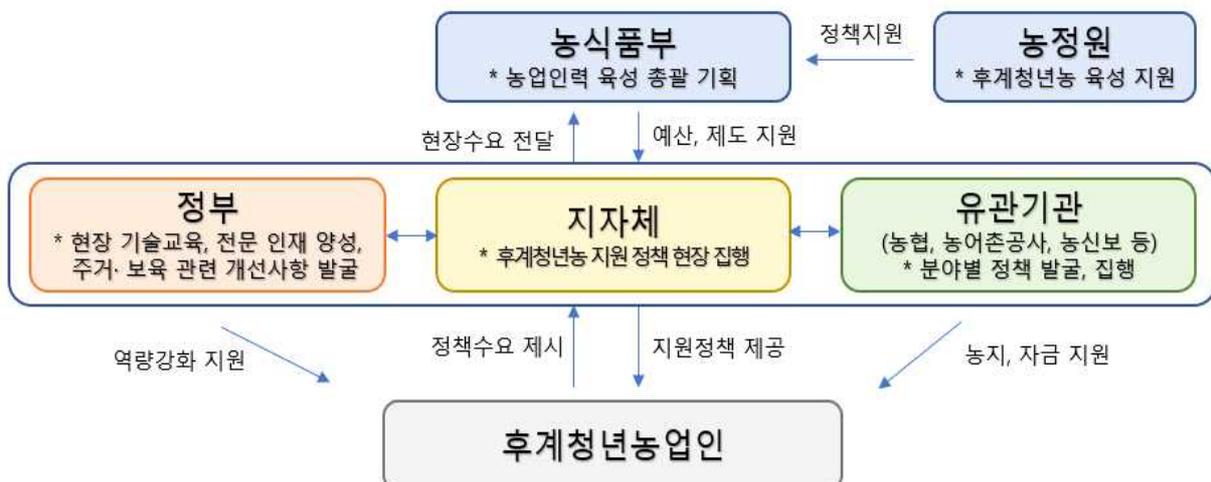
- (서비스공동체)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 내 다양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공동체 육성 및 확산
 - * 전기, 상하수도 등 집수리, 어르신 병원 이동 차량 운행, 말동무, 방법순찰 등
 - * 농촌 서비스공동체 운영 규모 : ('22) 22개소 → ('23) 30
- 농촌 서비스 분야에서 주민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·조정·홍보하는 청년 활동인력 지원
 - * 해당 읍·면에 체류하는 만 50세 이하 활동가에게 체류비, 활동비 지원(1인당 월 200만원 수준)

VI. 추진체계

1 정부-지자체-유관기관 간 정책협의체 운영

- (실행계획) 후계·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점검 및 보완(23~) ^{신규}
- (협의체)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, 청년농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'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*(가칭)' 운영(23~) ^{신규}
 - * (정부) 농식품부·농진청·관계 부처, (지자체) 각 시도 및 우수 기초지자체, (유관기관) 농협, 농어촌공사, 농신보, 농금원, 농정원 (청년농) 청년농 단체 및 우수 청년농 등
 - 후계·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고, 추가 개선·협력이 필요한 과제 발굴(분기별 1회 회의 개최)
 - 유관기관(농협 등)과 농식품부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'실무협의체'를 구성,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사항 논의(월 1회)
- (전문지원기관) 농정원의 기능을 조정하여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,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(22~) ^{신규}
 - * 기존 6인 규모의 '일자리지원실'의 청년농 지원 기능을 12명 규모의 '청년농지원처'로 확대

< 후계·청년농 지원 거버넌스 운영 방안 >



2 온·오프라인 정보 제공 체계 구축

- (플랫폼) 농지·자금·교육 등 농업 창업 정보를 '원스톱'으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, 지역·품목 단위 정보교류 지원('22.12~)^{신규}

* ('22) (1단계) 농지·자금·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중심 시범 운영 →
(23) (2단계) 빅데이터 분석 기반 도입 완료 후 본격 운영

< 농업 창업 플랫폼 주요 기능 >

- ① 정보·서비스 통합 제공 : 특정 지역의 농지(농지은행), 일자리(워크넷), 복지(복지로), 교육(방과후학교포털·농업교육포털), 주거(농어촌알리미·실거래가공개시스템·토지e음) 등 정보 제공,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신청까지 연결(해당 누리집 바로가기 포함)
- ② 회원 정보 분석 및 추천 : 회원 기본 정보(연령, 관심지역, 가족, 자산 및 직업 등) 및 활동 정보(교육 이수, 체험 참여, 검색 정보 등)를 종합 분석하여 회원의 영농 단계 및 관심 영역 분석, 현재 상태에 적합한 정보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추천
- ③ 연결·공유·개방에 기초한 상호 교류 : 회원 상호간, 회원과 회원이 관심 갖는 지자체 간, 회원과 민간 서비스 업체 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제공

- (현장지원) 지자체별(시·군 단위) 농업 기술센터 내 청년농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'청년농 코디네이터' 운영 확대

* 청년농 코디네이터 운영 규모 : ('22) 12명 → ('23) 40 → ('27) 165

-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 발굴, 농지·자금 정보 제공 등 역할 수행

3 정기적인 후계·청년농 정책수요 조사

- (실태조사) 후계·청년농의 영농현황, 영농과정 및 농촌정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DB화(5년 단위 실시)

* (법적 근거)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- 후계청년농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, 이전 계획 대비 달라진 후계·청년농의 정책 수요 파악

- (영농정착지원자 조사) 대상자의 경영 성과 등을 조사하고, 패널 조사를 병행하여 장기적인 정착 흐름 파악('23~)^{신규}

- 자격취소자, 중도포기자, 영농 미개시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 실패 최소화 방안 분석하여 정책 보완

참고

과제별 추진 일정

연번	추진 과제	주관 [협조]	일정
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

1. [유입] 후계·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확대

(1)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·개편으로 초기 소득 불안 완화

①	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단가 인상	농식품부	'23~
②	영농정착지원사업 : 진입요건 완화	농식품부	'23~

(2) 후계농업인 유입 확대

①	후계농업인 및 우수후계농업인 육성 규모 확대	농식품부	'23~
②	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	농식품부	'23~

2. [창업기반] 농지·자금 확보의 어려움 완화

(1) 농지은행의 매매·임대 지원 기능 대폭 강화

①	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물량 대폭 확대	농식품부	'23~
②	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	농식품부	'23~
③	선임대 후매도 등 청년농 농지 매입 지원 강화	농식품부	'23~
④	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정보 제공 확대	농식품부	'23~

(2) 젊은 인력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강화

①	후계·청년 인력 대상 융자 지원 강화	농식품부	'23~
②	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농신보 보증 강화	농식품부	'23~
③	청년농의 성장·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투자 확대	농식품부	'23~

3. [역량강화]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성장 뒷받침

(1) 성장 단계별 다양한 맞춤형·현장 교육 제공

①	예비 청년농의 영농 기초역량 강화	농식품부	'23~
②	창업 초기 교육·컨설팅 강화	농식품부 (농진청)	'23~
③	전문성 및 변화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성장 지원	농식품부	'23~
④	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	농식품부	'24~

(2) 국내외 온·오프라인 판로 및 융복합화 지원

①	국내외 온·오프라인 판로 지원 확대	농식품부 (농진청)	'23~
②	융복합화를 통한 소득 다각화 지원	농식품부	'23~

(3) 청년농의 농업분야 R&D 참여 및 활용 기회 확대

①	청년농의 R&D 참여 기회 확대	농진청	'23~
②	R&D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	농진청	'23~

4. [정주여건]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

(1) 거주 여건 개선

①	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	농식품부	'23~
②	농촌 특화 보육서비스 제공	복지부· 농식품부	'23~

(2) 생활서비스 개선 및 커뮤니티 구성 지원

①	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	농식품부	'23~
②	지역 안착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	농식품부	'23~

5. [추진체계] 거버넌스, 정보 제공 강화

①	후계·청년농 육성 거버넌스 구축	농식품부	'23~
②	후계·청년농 농업·농촌 정착 정보 제공 강화	농식품부	'22~
③	정기적 후계·청년농 정책 수요 조사	농식품부	'22~